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285
----------	------

발의연월일 : 2024. 12. 6.

발 의 자 : 서영교 · 민병덕 · 한민수
차지호 · 황정아 · 박홍근
강득구 · 복기왕 · 이해식
권칠승 · 정성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명확한 근거나 이유 없이 계엄령을 선포하여 전 국민을 불안하게 했고, 국가경제와 외교에 큰 악영향을 주었음. 또한, 국회에 특수훈련을 받은 군인을 투입해, 헌법에 근거한 국가기관인 국회에 강압을 행사하여 계엄해제를 방해하는 등의 기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음.

이에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를 막고, 국회와 국회의원을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계엄을 선포할 경우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계엄해제 시 국회가 의결하면 자동으로 해제되며, 계엄 선포 후 살인이나 폭행 등의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보호하고, 계엄 시 군이나 경찰이 국회에 진입하거나 관계자들의 출입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의 2 신설 등).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거쳐야”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의 예외) 제7조의 사항은 국회 및 국회의원에게 미치지 않는다.

제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입법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군이나 경찰 등은 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을 위해 국회를 출입할 수 없고, 국회의원이나 국회직원, 일반 국민들의 국회출입을 통제할 수 없다.

제11조제1항 중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를 “국회가”로,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를 “의결하면 계엄은 즉시 해제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를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면 지체 없이”로,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를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로 한다.

제13조 중 “현행범인인”을 “형법상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제124조, 제125조,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의2, 제324조의3, 제324조의4,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7조, 제368조, 제369조의 현행범인인”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 ④ (생 략)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 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 회의의 심의를 <u>거쳐야</u> 한다.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u>거쳐 국회의 승인</u> <u>을 받아야</u> -----.
⑥ (생 략)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 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 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 告)하여야 한다.	⑥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 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 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7조의2(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의 예외) 제7조의 사항은 국회 및 국회의원에게 미치지 않는 다.
제8조(계엄사령관의 지휘 · 감독) ① 계엄지역의 행정기관(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사 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	제8조(계엄사령관의 지휘 · 감독) ① ----- ----- ----- -----

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생략)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 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생략)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
단, 입법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군이나 경찰 등은 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을 위해 국회를 출입할 수 없고, 국회의원이나 국회직원, 일반 국민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할 수 없다.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국회가-----의결하면 계엄은 즉시 해제된다.

②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면 지체 없이-----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
-----형법 상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제124조, 제125조, 제13장 방

화와 실화의 죄, 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2
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
24조의2, 제324조의3, 제324조의
4,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
42장 손괴의 죄 중 제367조, 제
368조, 제369조의 현행범인인--

-----.